

#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적용...동구, 3억9000만원 구상권 청구도 현산은 불복... ‘화정동 붕괴사고’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 내려질 듯

17명(9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수습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3억 9000만원)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구상권 청구액 가운데 절반 정도인 유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미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만큼 중복 지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동구가 서울시 측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라, 서울시는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동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원청사인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82조)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1년 이내), 과징금(도급금액의 30%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등을 이유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

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금지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가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처분과 별도로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동구는 지난 7일 학동 사고 발생 이후 수습에 들어간 비용 3억 90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했다. 재난 원인 제공자에

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청구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생활안정자금(1억8000만원) 지원 비용을 두고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 합의금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사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야야 대납 비용 산정, 반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답변을 받고 나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사측과 피해자 가족 간의 보상 협의가 지체돼 비용 청구가 늦어졌다”면서 “사회 재난구호금 반환 요구에 사측이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유류비 폭등’ 어업인 지원 전남도, 긴급 예비비 투입

전남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긴급 예비비 84억원을 편성해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에 주소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증자생산장 등 약 2만9000여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4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인 경우, 휘발유, 중유, 3종에 대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4개월간 구입비용의 약 10%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어업인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선·양식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회용품 사용 다시 금지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3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복구청 지원순환팀 직원들이 안내 홍보문을 붙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 5·18조사위, 조사내용 비공개 조항 삭제 추진

‘의미있는 내용 발표’ 개정안 발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 중이라도 의미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진상조사

위의 활동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설훈(부천시 을-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설훈 의원 등 14명 국회의원은 이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34조)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표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이유라는 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월단체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법개정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일본 고교 교과서 곳곳 위안부 등 흔적 지우기 광주시민단체 강력 규탄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곳곳에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려는 역사 왜곡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과 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 대신,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하는가 하면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도 ‘종군’이나 ‘일본군’이 삭제된 채 단순히 ‘위안부’로 표기해,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 동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군이나 일본군을 삭제한 채 위안부만을 언급한 것 역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반인륜 범죄라는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가해주체를 지우거나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한 원인이 법원의 배상 판결을 가로막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판결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해 기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의 목적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다”며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적 진실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기금

### 조선이공대, 공모사업 선정

조선이공대학교가 올해 광주에서 공모한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광주 동구청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 관리 감독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지역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킴이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